

한국의 시민운동과 생활정치의 발전과정

하 승 우*

이 논문은 한국의 시민운동이 생활정치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발전시켜온 과정을 추적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을 둔다. 그동안 생활정치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시민운동의 흐름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1991년 지방선거 실시와 더불어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모색했던 여성운동, 둘째, 일본의 생활자운동을 본받아 생활정치운동을 벌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운동, 셋째, 시민정치교육이나 시민정치참여의 한 방안으로 생활정치를 주장했던 한국YMCA나 기타 시민운동,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주민운동이 그런 흐름들이다. 그리고 향후 생활정치의 발전을 위해 시민사회단체들은 권위주의적인 통제정치, 동 단위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관변단체, 일상 속에 스며든 가부장과 중앙집권화 등 국가가 만든 다양한 일상적 통제정치들에 맞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와 비제도를 넘나들며 시민주체들의 정치역량을 강화시키려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시민단체의 제도정치 진출과 더불어 제도정치와 비제도정치를 연계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가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교와 직장,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공기관이 생활정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시민적 공공성을 확립하는 장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 또한 생활정치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이 필요할 뿐 아니라 그 프로그램들은 일방적인 계몽교육이 아니라 주민들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며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하는 문제제기식 교육과정과 참여학습, 공동연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주제어: 생활정치, 지방자치제, 시민운동, 여성운동, 생활협동조합운동, 풀뿌리운동, 비제도정치, 시민적 공공성, 시민교육, 시민정치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1. 들어가는 말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연이어 열리면서 ‘생활정치’라는 개념이 매스컴을 장식하기 시작했다. 거리로 나선 시민들은 먹거리와 더불어 주택, 교육과 같은 생활상의 문제를 정치의 주요한 의제로 삼을 것을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에 요구했고, 기성 정치인들에게 정치를 전담시키지 않고 직접 목소리를 내겠다고 나서기 시작했다. 평범한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개입하겠다고 나섰다, 생활정치를 전면에 내세운 ‘생활당 창당준비위원회’(http://www.lifeparty.kr/)가 꾸러지기도 했다.

정해구는 이런 생활정치라는 개념의 유행이 “현재의 기성 정치에 대한 불만과 피로감이 증대하고 있고, 무언가 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와 심리를 반영”한다고 지적한다(정해구 2009). 즉 기성 정치의 무능함에 대한 시민의 불만이 직접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능동적인 정치행위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활정치라는 개념이 대안정치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등장하자, 한나라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생활정치를 이념 지향과 대비되는 말로, 그리고 중산층의 생활의제를 다룬다는 의미로, 또는 민생정치와 비슷한 의미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¹⁾

그런데 생활정치라는 개념은 최근에 갑작스레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다. 유럽의 경우 1990년대 중반부터 영국의 사회학자 기든스(A. Giddens)가 착취와 불평등, 억압에 맞서는 ‘해방정치’와 대립되는 의미에서 자아의 윤리적 선택과 정체성, 상호성을 강조하는 ‘생활정치’(life politics)를 주장해 왔다(기든스 1998, 86). 그리고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

¹⁾ 정당들이 생활정치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건 1992년 총선 때였지만 그 때는 단순히 주민을 위한다는 의미로 활용되었다.

히 벡(U. Beck)도 ‘아정치(sub-politics)’라는 개념으로 성찰적 근대화(reflexive modernization)의 민주주의를 설명했다(벡 1998). 한국에서도 1991년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와 더불어 생활정치라는 말이 활용되기 시작했고, 한국의 시민운동은 생활정치와 유사한 개념들, 예를 들어 ‘삶의 정치’, ‘주민자치’, ‘시민자치’, ‘생활자치’라는 개념 등을 꾸준히 활용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시민운동이 생활정치라는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해 왔는가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먼저 이 논문은 한국의 시민운동이 생활정치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발전시켜온 과정을 추적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을 둔다. 생활정치에 관한 얘기는 무성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담론이 어떻게 운동과정에서 드러났는지를 살핀 논문은 거의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생활정치와 관련해 각각의 시민사회운동이 보이는 차이점을 그 수용과정에서 드러내는 것을 이 논문의 목적으로 삼는다. 그리고 생활정치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의 시민운동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안하려 한다.

2. 한국의 시민운동과 생활정치

생활정치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시민운동의 흐름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1991년 지방선거 실시와 더불어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모색했던 여성운동, 둘째, 일본의 생활자운동을 본받아 생활정치운동을 벌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운동, 셋째, 시민정치교육이나 시민정치참여의 한 방안으로 생활정치를 주장했던 한국YMCA나 기타 시민운동,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주민운동이 그런 흐름들이다. 때때로 이런 운동들이 공통의 의제를 가지고 서로 연대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 운동의 흐름을 분명하게 구분하긴 어렵지만 각각의 특징을 드러내기 위해 편의적인 구분을 시도했다.

1) 여성운동과 생활정치: 지방선거와 여성의 정치세력화

1991년 기초/광역지방의원 선거가 다시 부활되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선거가 실시되면서 한국에서도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면서 여성운동 내에서 생활정치에 대한 관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먼저 1987년 21개의 여성단체들이 연합체인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은 여성운동의 대중적 기반을 확보할 뿐 아니라 올바른 여성운동의 방향을 정립하고 사회민주화와 민족의 자주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연대하겠다고 출범했다. 그런데 초기의 <여연>은 취업, 승진, 퇴직에서의 여성차별을 시정하라고 요구할 뿐 정치권력의 가부장성과 남성의 권력독점, 여성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여연>의 주요 사업은 주로 남녀고용평등법과 가족법의 개정,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같은 사회·경제적인 문제에 집중되었고 정치적인 의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았다.²⁾ 총선 때 ‘여성유권자’ 선언이 선포되기도 했지만 여성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보다는 부정선거 방지나 여성공약 이행, 남녀고용평등 등을 강조하는데 그쳤다.

그러다 1994년이 되면서 지방자치와 여성의 정치참여가 <여연>의

2) 이런 조심스러움은 <여연>의 공동대표였던 이미경의 인터뷰에서도 드러난다. “주부에 대한 관심을 본격적으로 갖기 시작한 건 한 삼사년 됐어요.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있어 그간 중요하게 생각해 온 노동과 생산 못지않게 사회 각 부문과 연관된 생활 쪽에 눈을 돌리게 됐는데요, 바로 소비영역 또는 재생산영역이라고 부르는 쪽이죠...그런 생각을 집중적으로 하게 된 것은 91년 첫 지방자치선거 때 지역사회운동에 대해 생각하면서부터였어요. 이것을 짧은 글로 써서 여연(한국여성단체연합의 약칭)정책세미나에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당시만 해도 되도록 오해없이 받아들여지도록 사족을 많이 달면서 조심스럽게 발표했죠”(강영희 1996, 328).

주요한 사업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³⁾ 20% 지방의회 여성참여 특별사업본부 및 후원회가 결성되었고, 지방의회 여성의원 3년 활동평가 토론회와 여성참여를 위한 기금을 모으는 후원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어서 1995년에는 지방의회 10대 여성정책과제가 발표되고 지방자치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지방의회 여성의원 진출 지원이 <여연>의 중요한 사업으로 채택되었다. 그리고 공천할당제,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활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 또한 <여연>의 후보 14명이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는 성과를 거뒀다.

<여연>만이 아니라 보수적인 성향의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이하 한국여협)>⁴⁾도 지방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과 정치참여를 촉구하는 세미나를 연이어 개최했다. 지방의회가 주민들과 함께 일상적인 일을 해결해야 하는데, 여성들은 가정관리와 자녀교육, 경제와 소비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 일에 가장 합당한 주체였다. 여성의 의식전환과 더불어 여성참여를 위한 교육의 확대, 후보의 발굴과 지원 등이 논의되었고, 보육과 학교급식, 여성폭력, 환경, 여성대상 복지 등이 주요한 여성정책으로 논의되었다(나영희 1994).

그리고 1987년에 성평등 민주사회와 여성대중운동을 지향하며 만들어진 <한국여성민우회(이하 민우회)>는 여성노동자들의 평등한 노동권 확보, 지역여성조직 건설과 생활협동조합운동을 활발히 펼쳤다. 그러다 1993년부터 <민우회>의 노원도봉지회가 ‘바른 의정을 위한 여성모임’을 결성하고 여성들의 의정활동감시 및 의회진출 활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1995년 지방선거에서 민우회 후보가 출마해 6명이 당선되기도 했다(2명의 광역의원, 4명의 기초의원)(윤정숙 1995). 이후 <민

3) 한국여성단체연합 홈페이지(<http://www.women21.or.kr>) 참조.

4) 한국여협은 1959년 12월 대한여학사협회, 대한YWCA연합회, 여성문제연구회, 부녀보호사업연합회, 학생문제상담소, 대한어머니회, 대한부인회총본부, 한양여성클럽의 8개 단체가 가입해서 만들어졌다.

우회>의 지부들이 ‘여성생활정치 아카데미’를 여는 등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예산을 모니터하고 분석하면서 생활정치과제를 찾는 장을 마련해오고 있다.

1999년에는 여성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목표로 삼는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이하 여세연)>가 만들어져 여성지도자 육성과 지방선거 참여, 여성정치학교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여세연>은 생활정치를 중요한 활동과제로 삼고 의정참여 및 주민권리찾기, 지역환경 개선 및 교육문화운동, 마을만들기 및 아파트공동체운동, 환경운동, 협동조합운동 등에 주목했다. 2007년 12월 21일, <여세연>은 ‘생활정치 실천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지역 의정모니터 사례와 여성지방의원들의 의정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여세연>은 “여성 지방의원 비율이 13.7%로 확대되었다고 하지만 지역구 여성 지방의원 비율은 4.26%에 그친다”며 “지역에선 여성정치운동 조직을 배제하는 문화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시민사회신문』, 2007. 12. 24).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여성운동의 생활정치는 기성정치와 다른 새로운 정치과정이나 정치개념보다 여성후보나 여성정책에 주목했다. 즉 생활정치는 생활세계를 잘 아는 여성후보들이 제도정치로 진입하거나 생활의제가 정치의제로 되는 것을 뜻했다. 지역여성조직건설활동과 생협활동을 펼치던 <민우회>가 생활과 지역정치의 접목을 모색하기도 했지만 여성운동은 여성정치인의 발굴과 여성리더십의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⁵⁾ 그리고 실질적인 면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⁵⁾ 그런데 여성운동이 독자적인 정치세력화와 여성리더십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한국의 정치운동이나 시민사회운동에 가부장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조주은은 노동운동에서 드러나는 가부장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자본의 착취에 대항한 노동운동을 하는 남성들 역시, 여성이 가정에서 만들어가는 ‘스위트 홈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여 가정에서 또 다른 권위를 행사하고 있다. 노동운동을 열심히 하는 남성들에게도 여성들은 자신의 하루 피로를 풀어주고 그저 가정을 지키는 사람일 뿐이다. 여성들은 ‘집안’ 일을 하며 ‘내조자’라는 생각이나 문화나 집

여성운동의 영향력이 약하기 때문에 지역정치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하기가 어려웠다.

그럼에도 故장미경은 여성운동의 생활정치가 아래로부터의 주장과 요구를 담아내고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문제를 정치화하면서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요구했다고 본다.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주민자치운동이 확대되면서 정치가 정부나 정당의 독점물보다 공적 영역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행위들이라는 점이 페미니즘과 여성운동 내에서 각성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장미경 2002, 182-183).

장미경의 지적은 신사회운동의 관점에서 여성운동의 생활정치적 의미를 부각시켰지만⁶⁾ 앞서 살펴봤듯이 실제 현실에서의 여성운동은 생활정치의 의미를 여성의원 배출과 여성리더십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여성운동에서 생활정치의 의미는 기존의 대의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적극성을 강하게 드러내지 못했다.

2) 생협과 생활정치: 소극적인 지역정치활동과 탈정치화

한국에서도 다양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활동하고 있다. 한국의 생협으로는 <한살림>, <아이쿱생활연합회>, <민우회생협>, <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두레생활연합회> 등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⁷⁾과 이들과 연결된 생산자협동조합, 그리고 안성, 원주, 인천 등지의 의료생활협동조합, 원주의 <밝음신협>이나 서울의 <논골신협>과 같

바깥까지 연장된다. 그런 생각과 문화는 어떤 남성 중심적인 조직에서나 뿌리깊다” (조주은 2004, 149).

6) 장미경은 생활정치와 페미니즘이 ①참여민주주의와 자원성의 원리, ②대안적 가치와 여성주의 가치, ③공공성(사회정의) 확보의 문제, ④공/사 이분들의 해체와 재구성이라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장미경 2002, 184-189)

7) 2008년 기준 소비자생협의 공급 총액은 약 3,300억 원이고 조합원 수는 약 32만 4천 명에 달한다(조완형 2009, 67).

은 신용협동조합 등 다양한 협동조합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런 다양한 협동조합은 지역사회를 근거로 활동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주요한 정치주체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본의 생활협동조합과 달리 한국의 생협들은 정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않고 있다. 생협의 이사나 이사장이 지방선거에 출마하거나 당선되는 경우는 있지만 지방선거 참여가 생협의 주요한 활동으로 논의되지는 않고 있다.

생협에서 정치활동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1999년 2월에 공포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조에서 찾을 수 있다. 제 4조는 “①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생협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생협들은 단체의 정관에 ‘정치관여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 정치관여 금지조항은 정관상의 죽은 조항이 아니다. 1983년에 창립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의 경우 이사회나 대의원총회의 공식 안건으로 정치와 관련된 안건이 상정된 적이 없다. 2002년 제 1차 이사회 의사록에서 2002년 활동계획과 관련해 조직활동 강화를 위해 전국적 NGO조직(노동조합 포함)과의 연대활동을 강화시키자는 제안이 있는 정도이다(생협전국연합회 2003). 정치활동이 이사회나 대의원총회의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는 현상은 소비자생협만이 아니라 의료생협이나 신협 등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생협의 공식활동이 정치를 안건으로 삼지 않을 뿐 아니라 생협 조합원을 대다수도 유기농먹거리를 먹는데 관심을 둘 뿐 지역의제나 정치활동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조합원 중 조합의 지역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는 많지 않고, 지역 생협의 홈페이지에는 들어가지 않고 물품 주문 사이트에만 들어오는 조합원들도 많다(김찬호 2008,

146). 그런데도 대부분의 생협들은 조합원의 편의를 고려하기 위해 개별 구매를 포기하고 개인구매나 매장중심의 유통방식을 택하고 있다(김기현 2007, 77).

그리고 생협의 활동가나 간사들 역시 이런 조합원들을 적극적으로 생활정치운동에 끌어들이려 하지 않는다. 사실 초기에 생협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사회운동에 몸담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염찬희 2008, 17-18) 생협의 이런 비정치성은 예외적이라 얘기할 수 있다. 이는 생협의 대중적인 확산과 무관하지 않다. 먹거리에 대한 관심만으로 가입하는 조합원의 수가 늘어나다보니, 생협의 실무자들은 정치적인 개입을 할 경우 외부적인 탄압을 받거나 내부적인 갈등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주요 활동이 여성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한국의 생협운동은 남성중심적 의사결정구조를 가지고 있다.⁸⁾ 그러다보니 여성조합원들의 구체적인 욕구와 지역사회의 공식적인 의제가 접목될 수 있는 장이 생협 내에서조차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한살림>의 경우 생명사상을 주장하며 총체적인 사회변화를 지향⁹⁾했기 때문에 ‘생명민회’라는 정치적인 공간의 마련을 목표로 삼기도 했다(윤형근 2002, 65). 그리고 <한살림>의 20년을 정리하는 책은 조합원들의 역량이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학교급식운동을 주도하기도 하고 환경

⁸⁾ <원주의료생협>의 최혁진 이사는 생협운동의 남성 중심적 의사결정구조를 ‘직접민주주의의 실종’이라며 비판한다. “생협운동 같은 진영들도 사실 보게 되면 이용자의 대다수는 여성인데 활동가의 대다수는 남성이고, 이사장들은 거의 다 남성이었지요. 생활에 기반한 운동이라고 그랬지만 그 안에서 원칙적으로 따지고 보면 직접적 민주주의는 실종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의 문제를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들은 의사결정에서 배제되어 있고, 의사결정은 일상적으로 생활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는 남성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정규호 2008, 187).

⁹⁾ 1989년에 채택된 ‘한살림선언’은 중앙집권화된 기술관료체제의 통제와 지배를 비판하면서 공동체 회복과 생명의 질서 실현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한살림모임 1990).

운동, 문화운동과도 결합하고 있다고 평가한다(모심과살림연구소 2006, 281). 하지만 이현희는 여성주의 정치학의 관점에서 <한살림>의 활동이 남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고 비판하기도 한다(이현희 2004, 130).

<민우회>가 만들어지고 2년 뒤인 1989년에 설립된 <민우회생협>은 지역에 주부대중조직을 건설하고 가정주부를 참여하는 ‘사회주부’로 전환시키겠다는 목적을 가졌다. <민우회생협>은 5인 이상의 공동체가 대표를 뽑고 공동체 대표들이 공동체협의회를 만들고 공동체협의회가 여러 개 모여 지역별협의회를, 지부를 만드는 조직방식을 지향했기 때문에 아래로부터의 동력이 강했다. 그리고 공동체 공급이 개별 공급으로 전환되면서는 매장이 지역사회의 사랑방 역할을 담당했다. 그런 활동력을 기반으로 <민우회생협>의 지부인 <동북여성민우회>나 <남서여성민우회>, <고양여성민우회>, <남부지역모임> 등은 노원구소각장문제, 초안산골프연습장반대운동, 북한산관통도로반대운동, 목동소각장 다이옥신 과다배출사건, 고양시 러브호텔반대운동, 예산감시네트워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여성민우회생협15주년 기념사업위원회 2005). 그리고 <민우회>와 함께 민우회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지만 <민우회생협> 역시 본부의 공식적인 사업으로 지방선거 개입이나 지역정치 참여가 논의되지는 못했다.

생협의 공식적인 사업으로 정치참여가 논의되지는 못했지만 조금씩 그것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대수는 협동조합이 초기에는 정치적 중립을 원칙으로 채택했지만 이후 그 원칙이 생활정치 대두와 더불어 폐기되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예산과 행정력을 갖추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친협동사회적 정책과 사업으로 유도할 수 있다면 생협운동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이대수 2007, 28). 그러나 이런 주장이 전체 생협운동의 공식입장으로 채택될 수 있

고 채택되었는가라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현재까지 생협운동은 정치와 경제를 분리시켜서 사고하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호혜 네트워크’(주요섭 2009)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있지만 그것의 정치적인 의미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생협의 생활정치운동은 삶의 변화를 강조하지만 그것의 정치적인 중요성을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다. 생협의 생활정치는 정치참여 금지조항 때문에 제도정치와 관계를 맺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조합원들의 활동이 개인화되면서 지역정치와 괴리되고 있다. 생협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생협의 정치력이 강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생활정치의 성격이 정치성을 탈각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3) <YMCA>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생활정치운동: 시민교육과 지방선거참여

<한국YMCA전국연맹>은 “젊은이들이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함께 배우고, 훈련하며, 역사적 책임의식을 계발하고, 사랑과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일하며 민중의 복지 향상과 새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으로써 이 땅에 하느님 나라를 이룩하려는” 목적¹⁰⁾을 가지고 1903년에 만들어졌다. <한국YMCA>의 홈페이지(<http://www.ymcakorea.org/>)에 따르면 2008년 현재 61개 지역시청년회에 회원 10만 명, 실무자 2천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참가자는 연 인원 100만 명에 달하고 있다.

<한국YMCA>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민교육이나 시민운동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그 중 하나이다. <YMCA>는 정치성을 강하게 드러내지 않는 공정선거감시나 의정감시활동만이 아니라 정치성이 강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운동이나 한미FTA반대,

¹⁰⁾ 이 선언문은 1976년 4월 <대한기독교청년회연맹> 전국대회에서 채택되었다.

낙천낙선운동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YMCA>가 직접 지역생협을 운영하기도 하고 복지관이나 청소년수련관 등을 위탁운영하기도 하며 자활사업이나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2003년 10월 <한국YMCA>의 시민정치운동본부는 시민사회의 형성 및 발전, 생활개혁, 시민의 자각과 역량 강화를 이루고 각성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정치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정치운동본부는 핵심사업으로 ① 시민정치능력을 개발하자! - 시민정치교육과 시민정치역량 강화, ② 강한 시민을 만들자! - 시민사회의 형성과 시민의 민주적 자치역량 강화, ③ 시민이 서로 돕고 스스로 해결하자! - 생활세계·문화 개혁과 주민공동체 형성, ④ 네 탓이다 그러나 내가 한다! - 주권자로서 정치사회와 지역 개혁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이를 더욱 구체화시켜서 전국 60여개 <YMCA>에 시민정치교육센터와 시민정치운동본부가 설치되었고 10만 회원을 중심으로 시민정치교육 및 실천활동을 대대적으로 확대해 20만 명의 민주시민지도력 육성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YMCA>는 이런 운동을 통해 문자해독률 향상, 민주적 토론역량 향상과 합리적 갈등해결능력 배양, 가부장적 권위주의 극복 등 시민적 가치체계 확립, 정치적 의사표현능력 등 시민정치능력 강화 등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¹¹⁾

<YMCA> 중앙의 활동과 더불어 2005년에는 <서울YMCA>가 ‘청년교실’의 새로운 형태인 ‘생활정치아카데미’를 개최해 시민리더의 커뮤니케이션, 토론법, 자원봉사 등을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서울을 제외한 각 지역에서도 이런 시민정치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데, 특히 안산에서는 ‘생활정치 지도자 양성을 위한 시민정치

11) 서울YMCA YMCA 뉴스(http://ymca.or.kr/news/view2004.php?news_num=714).

아카데미'가 열렸고 포럼도 여러 차례 열렸다. 그리고 <안산 YWCA>도 생활정치학교를 열고 풀뿌리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여러 리더십 향상을 논의하기도 했다. 또한 2006년에는 지방선거를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산생활정치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정당을 초월한 네트워크 구축을 시도하기도 했다.

<YMCA> 외에도 2002년 지방선거에서 <환경운동연합>의 녹색자치위원회가 '지방자치=생활정치=주민자치=환경실천'으로 보고 '녹색의 가치를 확산시킨다'는 모토 아래 50명의 녹색후보를 내어 15명의 당선자를 내기도 했다. 그리고 2003년 4월 19일에는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힘>(뒤에 <시민참여네트워크 국민의 힘>으로 단체명을 바꾸었다)이 창립되기도 했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정치개혁, 언론개혁, 국민통합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네티즌 연대의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YMCA>를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생활정치운동은 시민교육의 차원과 지방선거 개입의 차원, 둘 축으로 전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시민사회단체들의 정치참여는 생협과 마찬가지로 시민단체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틀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모두 단체와의 관계를 정리한 뒤에 출마할 수 있었다. 물론 선거과정에서 단체의 회원들이 후보자 당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선거과정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그 활동은 후보당선을 위한 선거활동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단체의 중립성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당선되고 난 뒤에도 정치인과 단체간의 공식적인 관계가 성립되기 어려웠기 때문에 당선자는 개인적인 정치적 선호나 판단에 따라 지역정치에 임해야 했다. 따라서 일본의 <가나가와네토>의 경우처럼 후보자가 '대리인'으로서 단체와 지역정치를 잇는 가교역할을 하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치교육프로그램이나 시민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만 그것이 일시적인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통해 발굴된 리더십이 지역정치를 변화시키는 역량으로 성장하기는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보수적이고 관변단체의 성격을 가진 여러 단체들이 이미 한국의 지역사회의 여론과 정책결정과정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자각한 시민이 조직적인 도움이나 연대의 네트워크 없이 그런 흐름과 맞서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하승우 2008).

또한 이런 프로그램들은 중앙단체가 마련한 기획을 지역사회에서 실행하는 차원에 머물렀고, 그 지역사회의 고유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특징을 반영하는 ‘지역비전’을 만드는 수준으로 발전되지 못했다.

4) 풀뿌리주민단체와 생활정치: 주민리더십과 지역의제의 발굴

한국의 풀뿌리주민단체들은 풀뿌리민주주의, 주민자치, 시민자치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시민사회운동은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초집중된 한국의 중앙권력과 싸우다 보니 비슷하게 중앙화의 길을 걸었다. 그러다보니 시민사회운동의 의제설정도 서울과 수도권에서 진행되고, 운동의 방식도 시민을 주체로 만들기보다는 시민의 이름을 내걸고 대신 싸우는 이슈 파이팅(issue-fighting)이나 권익 주창(advocacy)의 형태를 취해 왔다. 그러다보니 시민사회운동이 시민사회의 공론장을 활성화시키거나 대중이 자신의 필요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주체화되는 과정을 마련하지 못했다(하승우 2002).

그런데 1990년대 이후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한국의 풀뿌리운동¹²⁾도 그 양과 질에 있어 급격한 성장을 보였다.¹³⁾ 이호는 주민들을

12) 이 글이 뜻하는 풀뿌리운동은 소규모 단체나 지방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를 총칭하

대변하지 않고 주민들을 직접 조직하여 그들이 활동의 주체로 나서게 하는 풀뿌리운동의 영역을 세 가지로 나눈다. ①주민생활에 피해를 입히는 사안에 대해 주민들이 조직을 만들어 압력을 행사하고 이를 관철시키는 활동(쓰레기 소각장 반대투쟁, 철거반대 투쟁 등), ②주민들에게 일상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그들을 조직하고 지역사회의 여러 활동에 참여토록 하는 활동(시민학교, 녹색가게, 주민도서관, 공부방 등), ③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의 제반 생활환경 등을 개선하는 활동(다양한 마을만들기 사례 등)이 그것이다(이호 2002).

이처럼 풀뿌리운동은 다양한 영역에서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을 뿐 아니라 생활, 문화, 정치적인 삶의 변화도 유도하고 있다. 주민들 스스로가 자신의 생활터전을 바꾼 운동은 ①지역의 소외받는 아이들을 위한 터전을 만들고 있는 <녹색삶을 위한 여성들의 모임> (현재 <녹색마을사람들>로 개칭)의 활동, ②성미산 주민들의 동네 만들기, ③주민들에 의한 ‘동네문화’ 만들기(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놀이터 만들기, 오이도 유적보존운동, 원주한지문화제, 부산 금샘마을의 아파트공동체운동 금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주민참여를 통한 자치입법운동 역시 활성화되는데, ①안양시의 ‘안양시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 ②청주시 방과후 조례 제정운동, ③부천시 어린이놀이터 관리 조례 제정운동, ④과천의 보육조례개정운동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직접과천의 를 수하려는 사례들로, ①고양시 백석동의 주민투표

는 표현이 아니라 하승우의 정의와 같은 특징을 가진 운동을 가리킨다. ①역압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에서 시작하는 운동, ②역량강화 프로그램(empowerment program)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운동, ③토착리더십(local leadership)을 강화시키는 운동, ④지역사회의 공론장(public sphere)을 구성하는 운동(하승우 2006).

13) 1970년대 청계천 등 도시빈민밀집지역에서의 주민운동도 주민들을 주체로 하는 대중운동을 지향했다는 점에서 주민자치운동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은 주민자치운동이 우리 사회에서 생성되는 시기라 볼 수 있다(이호·김현 2004).

사례, ②고양시 러브호텔 반대운동, ③성남에서의 주민소환운동 실험, ④주민감사청구를 통한 주민들의 ③성남용의 견제, ⑤참여예산운동의 확산을 얘기할 수 있다(이호·김현 2004). 풀뿌리운동의 활동은 아래로부터의 시민사회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의 시민운동은 ①지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비전)에 대해 지역운동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참여하는 것과 ②운동이 주민과 괴리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주민 속으로 들어가 주민이 주체가 되는 운동을 위해 노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하승수 2007, 216). 예를 들어, 1998년에 만들어진 <열린사회시민연합>(이하 <열린사회>)은 2000년부터 각 지부별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자원봉사를 주요한 활동영역으로 잡고 ‘풀뿌리공동체운동’을 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열린사회>는 여러 지부의 풀뿌리공동체 활동과 더불어 본부가 풀뿌리공동체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주민과 시민을 정치의 주체로 세운다는 점에서 풀뿌리운동은 생활정치와 맞닿아 있다. 풀뿌리운동은 선거참여와 같은 제도화된 정치참여로 제한되지 않고 공동체의 구체적인 생활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지역사회의 대안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또한 의정감시운동과 예산감시운동을 넘어서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지역의 비전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시민후보를 내세우는 것을 넘어서 지역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풀뿌리운동은 생활정치와 서로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 심지어 부산의 <희망세상>과 같은 풀뿌리단체들은 지역사회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고 지방의회로 진출하기도 했다.

다만 한국의 풀뿌리운동은 생활정치를 자신의 주요한 개념으로 제시하지는 않고 그보다 주민자치나 시민자치를 자신의 중요한 표어로

삼고 있다. 풀뿌리운동은 한국의 현대사가 주민과 시민에게 수동성을 강요했고 시민 주도의 민주주의를 가로막았다는 점에서 자치를 가장 중요한 정치과제로 삼고 있다(하승우 2009a). 적극적으로 생활정치를 내세우지는 않지만 풀뿌리운동이 제기하는 주민/시민자치 의미는 생활정치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생활정치의 한국적 특징과 과제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의 생활정치는 시민운동 각각의 영역에서 조금씩 다르게 소화되어 왔다. 생활정치의 큰 원칙에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참여의 주체와 참여의 방식 등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91년부터 지방선거가 실시되고 자치제도가 본격화되면서 각 운동은 그 과정에서 조금씩 다른 목표를 마련해 왔다. 정치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부정적인 의식 때문에¹⁴⁾ 시민운동이 생활정치라는 개념을 조심스럽게 사용하다보니 그 의미가 분명해지지 않은 면도 분명히 존재한다. 여기서는 앞서 정리했던 시민사회진영의 생활정치운동 속에서 드러나는 특징들을 정리하려 한다.

1) 제도정치와 생활정치의 간극

1991년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는 생활정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들이 중앙정치 차원에서 결정되어 시민들이 그런 과정에 참여할 수

¹⁴⁾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정치와 정당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커졌다는 사실이다”(최장집 2007, 118).

없었고 지역적인 문제점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원도 부족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는 지방의원과 단체장을 선거로 선출할 뿐 아니라 중앙집중화된 참여과정을 분권화시키고 자원을 분배했다는 점에서 생활정치의 조건마련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아래로부터의 시민참여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된 지방자치제도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낳았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연이은 부정과 비리, 선심성 행정과 예산낭비, 토호들의 지방의회 진출은 ‘풀뿌리 보수주의’를 형성했다. 또한 지방선거와 관련해 의원이나 단체장들의 잦은 탈당, 입당 바람은 지방정치가 여전히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있다는 점을 증명해 왔다. 그러다보니 생활정치의 기반은 마련되었지만 정작 시민들은 생활정치의 주체로 등장하지 못하고 있고 보수적인 정당구조가 그 기반을 독점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운동은 의정감시단이나 의정지기단 등의 권력감시운동을 활발하게 펼쳤고, 한걸음 더 나아가 ‘시민후보’라는 이름으로 자기 후보나 공동후보들을 지방선거에서 당선시키기도 했고 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의 정당이 비민주적인 내부구조를 가지고 있고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경쟁구도를 갖추지 못하고 보수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정치와 생활정치의 거리는 매우 멀다. 시민사회운동 내에서도 한편에서는 제도정치 진입을 중요한 과제로 여기며 전략을 세우고 정당을 비롯한 여러 정치세력들과 연합을 모색한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제도정치를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하며 정치운동과 일정한 거리를 뒀다.

여성운동의 경우 생활정치를 제도정치로 진출하는 창구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 그것은 주부와 여성이 바로 생활정치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들이 제도정치로 진출하는 것을 생활정치의 활성화로 해석했

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여성후보공천비율의 확대를 비롯한 정치관계법의 개정, 여성의 정치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등이 여성운동의 관심을 끌어 왔다.

가부장적인 한국사회의 현실과 생활정치의 주체라는 측면에서 보면 여성운동이 생활정치를 이런 창구로 활용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런 관점에서만 생활정치를 바라본다면, 그것이 대의정치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했다는 점은 무시되기 쉽다. 예를 들어, 일본의 <가나가와네토>도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을 중요한 의제로 삼고 있지만 정치적인 경험을 지역사회로 확산시키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이기호는 <가나가와네토>만이 아니라 그 모태인 <생활클럽 생협>도 참여형 시민의 폭을 확대하려는 정치적인 동기에서 시작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이기호 2005). 그리고 <가나가와네토>는 그런 정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미니포럼과 정치스쿨, 참가형시스템연구소, 워커즈컬렉티브 등 다양한 형태의 정치과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다양한 과정들은 정치의 일상화를 통해 생활정치의 기반을 두껍게 만들고 있다.¹⁵⁾ 일본의 생활정치는 정치전략의 하위개념이 아니라 기존의 대의정치적 전략을 대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여성의 제도정치 진출은 중요한 과제이지만 생활정치의 전부가 아니라 한 부분일 뿐이다. 그러나 여성운동은 적극적으로 대안정치의 개념을 구성하지 못했다.

반면에 생협운동이나 시민운동단체들, 풀뿌리운동단체들은 자신들이 표방해 온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제도정치를 배제하는 생활정치를 강조해 왔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일구는 공동체와 다양한 공간들

15) “생활클럽운동의 경험과 그 역사는 생활자·시민에 의한 정치생활의 일상화에 의해서 정치사회를 일상생활에 가까이 다가가게 만든 운동이었으며, 일상생활의 토양으로부터 자율적인 생활자·시민을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생활자 정치’의 기반을 두텁게 만들고 넓히는 운동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요코다 카쓰미 2004, 165).

이 생활정치의 주요한 장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제도정치 영역을 배제한 채 제도화되지 않은 영역에서만 생활정치를 실현하고 확산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분명한 환상이다. 생활정치는 제도정치와의 치열한 대립과 적절한 협력을 통해서만 자기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이 생활정치의 중요한 특성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생활정치의 전체를 포괄할 수 없다.

남미의 분권과정을 분석한 쇤발더(Gerd Schönwälder)는 지역에 기반을 둔 대중운동과 정치적 좌파(political left)의 동맹이 세 가지 이유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첫째, 분권이 강력한 엘리트의 중앙국가기구와 이미 기득권화된 권력과 자원의 분배에 사실상 정치적으로 도전하는 것이라면, 상급 단위의 정치적인 지원 없이 성공할 방법을 찾기 어렵다.¹⁶⁾ 둘째, 좌파가 주도하는 정당과 대중운동의 연합구상은 정당과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는 대중운동을, 또는 다른 사회운동과 정치체계를 연계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중요성을 가진다. 셋째, 사실상 정치적 좌파는 대중 운동에 가장 우호적인 동맹세력이다(Schönwälder 1997, 759-762).¹⁷⁾

그러나 한국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경험이 부재하다. 2002년 민주노동당이 집권한 울산광역시 동구와 북구에서 참여예산제를 비롯한 몇 가지 진보적인 정책을 추진했지만 지역사회 자체를 변화시키는 전

16) 라이트(E. O. Wright)와 펑(A. Fung)은 역량강화참여거버넌스(Empowered Participatory Governance)를 주장하면서 그 실현방법으로 권력이양(devolution)과 국가기구의 변화만이 아니라 상급기구의 감독과 조정을 강조한다. 즉 토호세력의 발흥을 막고 공정한 규칙을 보장할 수 있는 상급기구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런 감독과 조정은 기득권 정당이 아닌 새로운 대안정당의 출현을 통해서 가능하다(Wright · Fung 2003, 3-42).

17) 실제로 그레(M. Gret)와 생토크(Y. Sintomer)는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리(Porto Alegre)시에서 브라질 노동자당(PT)의 집권이 실제로 시민의 직접권력을 뜻하는 제4권력을 형성시켰다고 주장한다. 노동자당은 ‘참여예산제도’(Participatory Budgeting)를 통해 주민에게 더 많은 권한을 줬고, 관료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 예산에서 우선순위 뒤집기를 과감하게 시도했으며,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토의과정을 마련해서 아래로부터 시작되는 변화의 토대를 마련했다(그레 · 생토크 2005).

락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브라질에서처럼 진보적인 정치세력과 대중운동의 결합이 가능하려면 먼저 ‘내부정치의 과잉과 외부정치의 부재’(장원봉 2006, 83)를 극복해야 한다는 과제가 제시되었다. 그리고 생활정치의 실현을 목표로 삼는 다양한 시민사회운동이나 풀뿌리운동 역시 진보적인 정당운동과 연계를 맺을 방법에 관해서는 특별한 경험이나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사회를 능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하는 과제가 존재한다. 이런 과제는 몇몇 활동가나 소수의 시민사회단체의 능력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주민을 성장시키고 그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때에만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생활정치는 생활세계와 제도정치 영역을 넘나드는 활력을 상실한 채 각자 자기 운동부문에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즉 다분히 편의적으로 정의되어 왔다. 생활정치가 정치를 재해석하며 삶과 생활의 차원으로 개념을 확장해 들어가야 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노력이 적극적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제도화된 권력정치의 규칙과는 다른 생활정치의 규칙과 규범이 정립되지 못했고, 한국의 시민운동은 정치적인 한계를 노정하고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정당과 운동을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¹⁸⁾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그런 주장은 선거과정에서의 전술적인 연대나 공동의제를 넘어서는 공동의 정치적 장을 마련하지 못했다. 생활정치가 정치과정만이 아니라 정치문화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¹⁹⁾ 생활

18) “운동과 정당은 긴장관계에 있지만,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부정의(injustice), 특히 국가권력과 시장권력의 불공정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양자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결국 문제는 어느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시민의 이해와 공적 이익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정당과 시민사회운동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정상호 2008, 110)

19) “생활정치가 분위기를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자발성이 공동체적으로 북돋워지고 그러한 자발성이 사적인 담을 허물어 공적 개인(public individual)의 탄생을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생활정치란 공적인 영역에서 박탈되어 사적인 영역에 갇

정치의 전략은 오랫동안 수동성을 강요당해온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마음껏 낼 수 있는 분위기와 공론장을 필요로 한다. 생활정치는 기성정치가 세운 경계를 지키지 않으나 그것과 무관하지도 않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생활정치운동은 ‘정치개념의 확장’이라는 역할을 담당하지 못했다.

한국사회에서 생활정치운동은 제도정치와의 연계성만이 아니라 능동적인 정치문화의 형성, 정치개념의 확장을 요구받고 있다.

2) 시민적 공공성의 미확립

생활정치는 개인과 사회의 이원론을 거부한다. 아주 개인적인 욕구라 할지라도 그것이 특정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²⁰⁾에서 사회적인 욕구와 연관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생활정치는 정치를 개인 권리와 이익의 실현으로 파악하는 자유주의의 정치개념이나 정치를 계급이익의 실현으로 파악하는 사회주의의 계급정치 개념 모두를 비판한다.

지역사회의 구조를 바꾸려한다는 점에서 생활정치는 계급적인 관점을 포기하지 않는다. 다만 큰 것의 변화를 위해 작은 영역의 변화를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속한 시공간 속에서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계급정치와 차별성을 가진다(오재환 1996, 101). 그리고 계급화되고 분절된 공간 속에서도 생활정치는 공간적 의미를 재생산하며 저항의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최병두 1999, 99).

혀진 삶의 미세한 영역들을 공동의 관심사로 복원시키는 것이기도 하다.”(이기호 2003, 175)

20) 개인은 “단자로서가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들의 다양성이 새겨지는 ‘주체의 지위(subject positions)’의 앙상블로 구성되는 장(site)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Mouffe 1993, 97).

예를 들어 환경문제나 보육같은 의제들은 노동자계급과 중간계급의 단결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활정치는 계급적인 관점을 가지면서도 계급에 내포된 차이와 계급을 넘어서는 연대의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생활정치는 개인적인 삶의 변화를 추구하지도 않는다. 시민의 삶은 사회적인 구조와 관계망 속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개인의 변화는 사회적인 변화를 통해서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사실상 생활정치의 이슈가 구체적인 삶의 욕구와 긴밀한 연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그 정치적 힘은 가족과 친구, 이웃, 직장동료 등과의 친밀한 관계망을 통해 형성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통 정치라고 하면 사적이지 않은 것에서 공적인 것을 찾기 쉽지만, 생활정치는 구체적인 삶의 욕구가 발현되면서 새로운 관계와 조우하고 때론 그런 관계와 갈등하며 그 욕구가 새로이 정의되는 과정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공적인 활력에 주목한다. 만일 사적인 욕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적인 것에 헌신할 것을 강요할 경우, 그 정치는 경직되고 수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

참여예산제도에서 드러나듯이 현실에서는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욕구가 생활정치를 구성하고 활성화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다. 사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해관계가 기존의 제도적인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한 운동으로 전환된다면, 그것은 능동적인 정치의 장을 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이의 ‘보육’이나 ‘급식’은 사적인 일이지만 사회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보면 공적인 주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보육이나 급식은 철저히 사적인 부담으로 떠넘겨져 왔다. 그런 점에서 보육조례나 학교급식조례 등은 사적인 욕구와 공적인 욕구가 서로 연계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운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한다. 그것이 한 개인의 욕구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사회적 욕구로 전환된다면 생활정치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 현대사회에서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이 엄격하게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한다.

작년에 화두가 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김선욱은 주관적인 관계에 바탕을 두지만 대화를 통해 삶의 총체성이 드러나고 이런 대화에 근거해 집단적인 담론이 만들어지고 정치적인 행위가 등장하는 것이야말로 생활정치라고 주장한다(김선욱 2008, 409). 따라서 생활정치운동은 사적이고 개인적인 욕구와 이해관계에 근거해 집단적이고 공동체적인 욕구와 이해관계를 구성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했다.

그러나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의 연계성이 시민운동의 주요한 화두이긴 하지만 그 화두를 풀어나가는 방식은 생활정치의 영역과 많은 거리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도 시민사회운동 내에서는 노동운동 중심의 시각에서 공공성의 문제를 바라보거나(신진욱 2007, 29-30) 운동의 약점을 여전히 지도력이나 의제조직능력에서 찾기도 한다(오건호 2008, 151). 이런 관점들은 공공성을 여전히 삶과 괴리된 것으로서, 생활정치의 영역이 아닌 것으로 바라본다. 생활정치가 노동만이 아니라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반응하고 대안을 조직하는 과정을 만들려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런 지적들은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시민사회운동 내부에서도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의 연계성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 여성운동은 사적인 것의 정치성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운동으로 여성운동을 꼽을 수 있지만 시민사회운동 내에도 깊이 뿌리내린 가부장적인 문화/권력은 여성성을 남성화하거나(권인숙 2005) 남성성을 고집하며 차이를 배제함으로써 공적인 것을 분리시키고 있다(정희진 2005). 그리고 생협운동의 경우도 조합원

들의 개별적인 욕구가 사회적인 변화 속에서만 충족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운동의 중심에 서지 못하고 있다. 또한 생활의 의제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을 사는 시민들이 그런 의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되도록 조직해야 하는데, 그런 의식화·조직화는 명목적으로만 강조될 뿐 운동의 구체적인 과제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사회공공성을 강조하는 시민사회운동들은 공공성이라는 추상적인 가치를 구체적인 생활상의 문제와 접목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생활정치 역시 추상적인 가치로만 얘기되지 실제 생활을 바꾸는 운동으로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생활정치운동은 구체적인 개인의 욕구를 공적인 의제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정치주체를 성장시키고 시민적 공공성을 확립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3) 교육과 지역비전의 괴리

<YMCA>나 다른 시민단체들의 활동에서 드러나듯이 생활정치에 관한 교육은 다양한 형태로 활성화되어 왔다. 생활정치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강조하는 교육은 참여의 중요성과 의미를 강조하고 정치개념을 확장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중앙집중화된 방식에서 벗어나거나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 YMCA>가 2005년에 진행했던 ‘생활정치아카데미’의 프로그램을 살펴보자. ① 시민리더란? N·G·I²¹⁾: 시민리더, 생활정치, N·G·I 배우기, ② 시민리더의 커뮤니케이션: 타인의 공감을 얻는 대화란?, ③ 시민리더의 토론법: 시민리더의 토론 자세, 기술 배우기, ④ 시민리더의 글

21) Non-Governmental I. 생활속의 문제를 주위 사람들과 함께 해결하고 자신들이 꿈꾸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누구나, 즉 나(I)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프로그램

쓰기 역량강화: 마음을 움직이는 글, 나도 이젠 글쟁이!, ⑤접속! voluntainment 자원봉사: 자원봉사팀 리더십, 즐기는 자원봉사, ⑥실천! N·G·I 프로젝트: N·G·I 프로젝트 실행. <YMCA>의 프로그램은 생활정치보다는 시민리더를 기르는데 초점을 맞췄고 기존의 시민리더십 프로그램을 생활정치라는 이름으로 실행한 것에 가까웠다. 물론 N·G·I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는 생활정치의 개념과 맞닿아 있지만 실천 프로그램 역시 생활정치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머물렀다.

다른 단체들이 진행한 프로그램은 이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다. <안산YWCA>가 2008년에 진행한 ‘지방화 시대, 삶의 정치 실현을 위한 제 6회 생활정치학교’의 프로그램은 ①오리엔테이션: 내 삶에서 정치를 깨우다(안산YWCA), ②여성의 정치참여(김은경/여성정책연구원 팀장), ③여성정책과 예산(변신원/양성평등진흥원 연구원), ④생활정치 실현을 위한 시민 참여사례(김경희/대전여민회 공동대표), ⑤풀뿌리 지방자치와 시민참여(정상호/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⑥여성리더십(김은경/세종리더십센터 소장), ⑦여성정치인과의 만남(최순영/전 국회의원), ⑧의회모니터 활동사례 및 방법(안산의정치김이), ⑨안산시의회 및 국회 견학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경남여성회>가 2007년에 진행했던 ‘동네방네 생활정치학교’의 프로그램은 ①의사소통훈련(이임숙/경남여성회 이사), ②여성의 눈으로 세상보기(이민주/여성정치발전소 소장), ③정치로 보는 좋은 부모되기(신강숙/성·가족상담소 소장), ④성평등한 정책과 예산보기(이화숙/전 부산여성회 부회장), ⑤여성 정치인 만나기 (이종엽/창원시의원), ⑥여성의 삶과 일 (박영미/한국여연 공동대표), ⑦우리동네 의제 찾기(워크샵/수료식)로 구성되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생활정치의 의미와 중요성을 소개할 뿐 아니라 자기 지역의 정치과정과 예산, 정책을 이해하고 여성리더십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 역시 하루 2시간의 교육과정만으로 주부가 생활정치의 주체로 형성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더군다나 그 교육을 진행하는 사람을 지역사회 내부의 인적 자원이 아니라 외부의 전문가에서 찾았기 때문에 일회성 프로그램의 성격이 강했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 속에서 그 지역에 맞는 생활정치의 비전이 구성되리라 기대하기도 어려웠다.

그런데 <고양여성민우회>가 2005년에 진행한 ‘여성생활정치 아카데미’의 경우 기초교육과 심화과정을 구분해서 세밀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기초교육과정은 모두 16강으로 ①개강식과 21세기 여성의 역할(윤정숙/전 민우회 대표), ②새로운 시대, 새로운 여성리더십(박은경/버츄프로젝트 한국위원회 위원), ③‘미덕의 율타리치기’전략(박은경), ④‘배움의 순간을 포착하기’ 전략, ⑤‘정신적 동반의 관계맺기’ 전략(박은경), ⑥고양을 이해하자: 고양의 역사(정동일/고양시 공무원), ⑦고양을 이해하자: 고양의 환경(한동욱/한국어린이식물연구회 회장), ⑧고양을 이해하자: 고양의 교육(최창의/고양시 교육위원), ⑨고양을 이해하자: 고양의 복지(백선희/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⑩고양을 이해하자: 고양의 도시계획(이동환/높푸른고양21운영위원장), ⑪고양을 이해하자: 고양의 시민운동 사례(김인숙/고양예산감시네트워크 공동대표), ⑫여성의원 이야기(김혜련/고양시 의원), ⑬외국지방의회 사례: 자치, 지방의회의 역할(하승수/변호사), ⑭여성의 눈으로 세상보기: 성인지 예산, 성별영향평가(윤정숙), ⑮몸과 마음으로 친해지기(이향림/예술치료사), ⑯졸업식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심화과정은 모두 9강으로 ①선거전략기획과 실선선거(오세제/이트렌드 대표), ②시민참여와 예산(오관영/함께하는시민행동 기획실장), ③정책과 예산에 대한 이해(박윤희/고양시 의원), ④의회에 대한 이해(김인숙), ⑤의회 둘러보기: 상임위 방청(김인숙), ⑥의회 둘러보기: 본회

의 방청(김인숙), ⑦고양의 비전을 찾아서1: 아파트공동체(김인숙), ⑧고양의 비전을 찾아서2: 생활과제 찾기1(김유임/고양시 의원), ⑨고양의 비전을 찾아서3: 생활과제 찾기2(김유임/고양시 의원)로 구성되었다. 심화과정은 기초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고양여성민우회 2005).

고양여성민우회의 프로그램도 다른 지역의 프로그램처럼 교육대상인 주부들의 현실을 고려해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씩 진행되었지만 이론교육만이 아니라 현장 실습을 겸하고 외부의 전문가보다 지역사회에서 교육의 주체를 형성하고 교육의 지속성을 꾀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의 비전을 주민들이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앞서의 프로그램들보다 생활정치의 맥락과 일치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생활정치에 대한 관심과 그 의제가 각 지역사회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해서 아래로부터 형성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생활정치운동은 지역사회 고유의 욕구나 문제의식을 활성화시키는 방식보다 중앙단체의 문제의식이나 운동의제를 지역단체가 받아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의제를 설정하는 것도 하나의 권력이라고 볼 때, 여전히 중앙에서 의제를 독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생활정치운동은 아래로부터 지역사회 고유의 욕구와 의제를 파악하고 이에 기반해 지역사회의 생활정치역량을 강화시키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4. 결론: 생활정치의 전망과 가능성

이런 생활정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일제시대부터 만들어진 권위주의

적인 통제장치, 동 단위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관변단체, 일상 속에 스며든 가부장과 중앙집권화 등 국가가 만든 다양한 일상적 통제장치들에 맞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와 비제도를 넘나들며 시민주체들의 정치역량을 강화시키려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앞서 정리했듯이 생활정치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여러 원인들을 분명하게 규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야 한다. 제도정치에의 참여로 정치의 개념을 좁게 보거나 일상생활의 다양한 의제들을 비정치적인 노력만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생활정치의 활성화를 가로막는다. 그리고 공공성의 의미를 지나치게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가치로 파악해서 구체적인 일상생활 속의 문제들을 사적이고 소극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 역시 생활정치의 확장을 방해하는 요인이다. 또한 생활정치를 하나의 담론으로만 활성화시키고 생활정치의 실제 장인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시민운동의 전략 역시 한국사회에서 생활정치의 효과적인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이런 원인들을 바로잡으려면, 우선 제도적인 진출과 더불어 제도정치와 비제도정치를 연계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가 강화되어야 한다. 지금은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시민운동이 후보를 내도 당선을 시키고 나면 단체와의 연계성이 사라져 후보자와 단체의 의견이 대립하거나 그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중립성의 신화에서 벗어나 시민단체의 정치성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해야 하고 시민들이 이런 구조를 만드는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하승우 2009b).

그리고 학교와 직장, 지역사회들의 다양한 공공기관이 생활정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시민적 공공성을 확립하는 장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런 다양한 사회적 장들을 민주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시민적 공공성을 아래로부터 확립하는 중요한 변화의 출발점들이다.

또한 각 지역사회가 스스로 자기비전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자원들이 각자의 차이에 근거해 연대할 수 있는 운동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정상호 2006). 시민사회운동은 생활정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치적 장과 정치과정들이 지역사회에서 민주적으로 구성되도록 온 힘을 쏟아야 한다.

또한 생활정치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이 필요할 뿐 아니라 그 프로그램들은 일방적인 계몽교육이 아니라 주민들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며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하는 문제제기식 교육과정과 참여학습, 공동연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프레일리 2003). 시민들의 잠재적 정치역량이 살아날 때에만 생활정치는 아래로부터의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대안적인 정치개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2009년 9월 10일 접수, 2009년 11월 13일 채택)

참고문헌

- 강영희. 1996. “여성운동가 이미경.” 『여성과 사회』. 7. 326-338.
- 고양여성민우회. 2005. 『여성생활정치 아카데미 자료집』. (비매품).
- 권인숙. 2005. 『대한민국은 군대다』. 파주: 청년사.
- 그레, 마리옹·생포메, 이브. 김택현 역. 2005. 『뽀르두 알레그리: 새로운 민주주의의 희망』. 서울: 박종철출판사.
- 기든스, 앤서니. 한상진·박찬욱 옮김. 1998. 『제3의 길』. 서울: 생각의 나무.
- 김기현. 2007. 『우리 시대의 커뮤니티』. 서울: 이매진.
- 김선욱. 2008. “촛불 광장에서 아렌트를 만나다.” 『시민과 세계』. 14. 404-420.
- 김찬호. 2008. “iCOOP생협 10년의 사회문화적 의미”. iCOOP생협현대 지음. 『협동, 생활의 윤리: iCOOP생협 10년사』. 서울: 도서출판 푸른나무.

- 나영희. 1994. “지방자치와 여성정책.” 대구직할시 여성단체협의회 주관 토론회.
대구. 11월.
- 모심과살림연구소. 2006. 『스무살 한살림 세상을 껴안다』. 홍성: 그물코.
- 생협전국연합회. 2003. 『생협전국연합회 20년의 기록: 1983~2003』(비매품)
- 신진욱. 2007. “공공성과 한국사회.” 『시민과 세계』. 11. 18-39.
- 여성민우회생협 15주년기념사업위원회. 2005. 『여성들의 아름다운 도전, 또 다
른 세상: 한국여성민우회 생협 15년(1989~2004)』. (비매품).
- 염찬희. 2008. “iCOOP생협 10년의 역사와 활동”. iCOOP생협연대 지음. 『협동,
생활의 윤리: iCOOP생협 10년사』. 도서출판 푸른나무.
- 오건호. 2008. “시장권력에 맞서 공공성 연대운동으로.” 『시민과세계』. 14.
- 오재환. 1996. “일상생활의 구조와 생활정치.” 『사회조사연구』. 11(1). 89-103.
- 요코다 카쓰미. 나일경 옮김. 2004. 『어리석은 나라의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시민:
생활클럽 운동그룹과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의 모델 만들기』. 서울: 논형.
- 윤정숙. 1995. “지방자치선거와 민우회 활동.” 일본 생활클럽·한국여성민우회
공동주최 ‘여성의 의회진출과 생활정치 확대를 위한 한일세미나.’ 9월.
- 윤희근. 2002. “한국 생명운동의 뿌리와 공동체.” 모심과살림연구소 편. 『모심
侍』. 서울: 모심과살림연구소.
- 이기호. 2003. “생활정치의 관점에서 본 한일간 시민운동의 비교연구.” 『시민사
회와 NGO』. 창간호. 173-203.
- 이기호. 2005. “자율과 자치의 주민권력 : 대리인운동-지역정당 일본 가나가와
네트워크운동의 사례.” <초록정치연대> 제 1회 지방자치학교. 10월.
- 이대수. 2007. “한국 생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안: 지역화/다각화/전문
화 전략.” 소비자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제 2차정책토론회. 11월.
- 이현희. 2004. “생협운동의 여성주의 정치학으로서의 가능성.” 『여성학논집』.
21(2). 111-150.
- 이호. 2002. “주민자치·주민자치운동의 현황과 과제.” 시민자치정책센터 편.
『풀뿌리는 느리게 질주한다』. 서울: 갈무리.
- 이호·김현. 2004. “주민자치운동 1987-2002.” 시민의 신문사. 『한국시민사회운동

- 15년사』. 시민의신문사.
- 장미경. 2002. 『생활정치와 페미니즘: 생활자치운동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52. 182-199.
- 장원봉. 2006. 『진보적 지방자치의 성과와 과제: 울산 동구와 북구를 중심으로』 한상진 외 지음. 『진보적 지방자치,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서울: 후마니타스.
- 정규호. 2008. 『전환기 속의 시민사회, 운동과 변화 사이에서』. 주성수 외. 『아래로부터의 시민사회』. 파주: 창비.
- 정상호. 2006. 『NGO를 넘어서』. 서울: 한울 아카데미.
- 정상호. 2008. “‘촛불’과 한국 민주주의: ‘풀뿌리 생활정치’의 모색.” 『환경과생명』. 57. 109-119.
- 정해구. 2009. “생활정치로의 전환과 2010년 지방선거.” 『프레시안』2009년 6월 30일자.
- 정희진. 2005. 『페미니즘의 도전』. 서울: 교양인.
- 조주은. 2004. 『현대가족 이야기』. 서울: 이가서.
- 조완형. 2009. “생협의 사회적 역할과 미래상.” 녹색연합·생태유아공동체전국협의회·생협전국연합회·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전국귀농운동본부·한살림 공동주최 ‘경제위기와 민의 대안 토론회.’ 3월.
- 주요섭. 2009. “삶의 위기와 ‘호혜’의 상상력: 자립과 연대의 민생경제를 위하여.” 녹색연합 등 공동주최 ‘경제위기와 민의 대안 토론회.’ 3월.
- 최병두. 1999. “‘삶의 질’로서 공간의 유형화와 공동체를 위한 생활정치.” 대한지리학회 심포지움 자료집. 81-107.
- 최장집. 2007. “한국 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 최장집 외 지음. 『어떤 민주주의인가』. 서울: 후마니타스.
- 프레이리, 파울로. 남경태 옮김. 2003. 『페다고지』. 서울: 그린비.
- 하승수. 2007. 『지역, 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 한국 풀뿌리민주주의의 현실과 전망』. 서울: 후마니타스.
- 하승우. 2006. “한국의 풀뿌리운동과 풀뿌리민주주의에 관한 이론적 접근.” 한

- 양대 제3섹터연구소 주최 ‘시민사회연구회’ 제 30차 세미나. 10월
- 하승우. 2008. “한국의 지역사회와 새로운 변화전략의 필요성.” 『경제와사회』. 75.
- 하승우. 2009a. “공유지의 비극에서 공유의 민주주의로.” 『녹색평론』. 108.
- 하승우. 2009b. “진보적 지방자치와 생활정치.” 민주노동당 지방선거아카데미
자료집.
- 한살림모임. 1990. 『한살림1』. 서울: 한 살림.

- Fung, Archon · Wright, Erik Olin (eds.). 2003. *Deepening Democracy: Institutional Innovations in Empowered Participatory Governance*. New York: Verso.
- Mouffe, Chantal. 1993. *The Return of the Political*. London: Verso.
- Schönwälder, Gerd, 1997. “New Democratic Spaces at the Grassroots? Popular Participation in Latin American Local Governments.” *Development and Change*. vol. 28.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ife Politics in Korea

Seung-Woo Ha

This study is to focus on the analysis of the development of life politics and civil movement in Korea. Since the local election of 1991, the Korea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have increased their role in various areas such as woman's political empowerment, life politics movement, citizenship education, citizen's politic, grassroots democracy. In spite of their positive role for democratization of Korean political society, there are some critics on the role and activities of their role. Some criticize that there is a gap between institutional politics and non-institutional politics. And some criticize the immature of civic publicity and the gap of citizenship education and alternative development plan. This Study bring up the needs and importance of the network for citizen politics. And foster the participatory innovation of public institution and the vitalization of the problem-posing education and action research program.

Key words: life politics, local government system, civil movement, women's movement, co-op movement, grassroots movement, non-institutional politics, civic publicity, citizenship education, citizen's politics